

광주 문화·첨단산업 육성 전남 경제·관광 거점 도약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의 광주·전남지역 공약은 주요 현안을 비교 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에는 문화산업·첨단산업 육성 위주의 공약을, 전남에는 경제·해양·관광 거점으로의 도약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이 당선자의 광주와 전남지역 주요 공약을 정리한다.

■ 광주·전남 주요 공약 뭐가 있나

◇광주시=이 당선자의 광주지역 공약은 지역 최대 현안인 수 있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문화산업 육성과 R&D(연구·개발)특구 지정, 주요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문화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제시한 '세계문화상품단지' 조성이 가장 눈에 띈다. 세계 문화상품단지는 광주만의 문화가 체화된 상품을 개발, 전국적인 유통망

등의 단계별 사업을 통해 광주를 LED조명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민주·인권·평화로 대변되는 광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이용한 국민통합적 기능을 약속했다. 현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민주주의 전당과 민주공원의 광주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시가 기대하지 않았던 가전로봇 시범단지 조성과 자동차 부

■ 이명박 당선자 광주·전남 주요 공약

광주	세계문화상품단지 조성
	광주 첨단산업단지 RD특구 지정
	LED조명도시 조성
	한국 민주주의 전당 및 민주공원 건립
	가전로봇 시범단지 건립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전남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호남고속철도 임기내 완공 및 무안공항 경유 검토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중계 항공물류기지로 개발
	목포에 조선터미널 조성
	서남해안 도시에 '한국형 베네치아'다도해 해양관광관 조성
	광양항을 3세대 한민으로 개발
J프로젝트, F대회 적극 지원	
고흥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영산강 운하, 전역 국비들어 전국 첫 개발	
화양지구에 국제해양레저파크 개발	
순천 국제교육문화도시로 조성	



이명박 당선자의 지방 공약은 '강한 지방을 위한 광역경제권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 당선자가 지난 12월 2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유세를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문화중심도시 조성 기반 육성 R&D(연구·개발) 특구 지정

을 갖추고 동시에 해외시장 공략을 목표로 한 시설로서 광주를 문화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인프라다.

특히 이 당선자는 세계문화상품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디자인센터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문화상품의 집중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규모를 건립하며, 문화상품 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세계문화상품디자인 전문학교 설립, 광주를 식테마파크 육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 첨단산업단지 R&D특구 지정도 추진된다. 산업용지를 확보해 2009년까지 2단계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광산업과 디지털 가전,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한국전력 본사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계획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도 내걸었다. 태양에너지 실증연구사업, 연료전지 실증단지 구축 사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가 광산업 육성도시로서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고 오는 2009년 광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명용 LED개발, 반도체 조명 확산, 미래반도체 조명도시 구현

플러스터 조성 사업도 공약에 들어 있다. 시가 고품화 사회에 대비해 건의한 국립노화연구소 설립도 공약에 반영됐다. 특히 당선자는 시가 치매병원과 재활병원 등 노인과 관련된 모든 병원 및 부대 시설을 전국 최초로 한 곳에 모으는 '노인의료서비스 복합단지'와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운영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사업 실현을 낙관하고 있다.

◇전남도=이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호남 광역경제권 발전구상 8대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남해안시대를 여는 한반도 선벨트(Sunbelt) 구축'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전남의 지속

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수 박람회 개최지역을 세계적 시범모델로 조성하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여수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천을 국제 교육문화도시로 개발하고, 광양 경제자유구역의 기능도 확대·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화양지구에 국제해양 레저파크를 조성하고 순천을 국제교육문화도시로 육성하며, 고흥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무안, 목포, 영암, 해남 등 환황해권 육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중계항공 물류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목포에 미항산업을 발전시키며, 목포대에 의과대와 대학병원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당선자는 또 선거기간 동안 첨예한 이슈로 등장했던 한반도 대운하

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역시 임기내인 2012년까지 완공하는 것은 물론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도록 하고 목포~광양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여세권 일대를 산업지구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이 대표적인 농도라는 점을 감안, 친환경 농산물 육성 및 생산·가공

기능을 갖춘 글로벌 농산물 물류기지를 조성하고, 남도의 해안도시를 연결해 '한국형 베네치아'로 불리는 다도해 해양관광권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밖에 여수와 순천, 광양, 하동 등지를 연계해 물류와 기계, 항공,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남중경제권'을 형성하고, 광양항을 제3세대 항만으로

개발하며, 전남의 최대 현안사업인 J 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와 F1(포물러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호남 인사를 차별없이 등용하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가 건의한 정책과제 가운데 '전남~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만 제외됐을 뿐 나머지는 거의 모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명박 당선자가 '지방성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만큼 낙후한 호남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호남 광역경제권 8대 프로젝트 남해안시대 한반도 선벨트 구축

적인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는 특히 전남지역의 현안과 미래사업을 담고 있는 이들 공약을 통해 전남을 '국토 서남권의 경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당선자는 우선 '광양~여수~순

와 관련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전역 국비를 들여 영산강 뱃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호남운하 일대를 산업·물류·관광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당선자는 특히 선거를 이틀앞둔 지난 17일 전북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영산강운하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혁신, 기업, 문화도시 예정대로 갈까

이명박 당선자 참여정부 지방분권에 부정적...행·재정 지원 약화 우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나주 공동혁신도시와 무안 기업도시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 공약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역시 관심사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7월 후보 시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예정지인 나주를 찾은 자리에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충남지역 방문에서도 행정 복합도시 건설 사업의 일관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이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발언을 돌이켜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원점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유권자들의 표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실패작'으로 평가했다는 점에 비추면 사업의 개념이나 규모, 세부 계획 등에서 변화를 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당선자가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동혁신도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도는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 수도를 지방으로 옮기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당선자는 최근 TV연설에서 "현 정권이 지방 분권을 내세우고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

지만 지방은 더 어려워졌다. 나눠주기 식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균형발전은 지방을 광역경제권으로 만들고, 거기에 국내의 기업이 찾아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확실히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당선자의 일관된 시각이 자칫 사업에 대한 선행적 지원이나 사업 규모 축소,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별법제정과 법정 종합계획 수립으로 법적·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사업에 비해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8천여원의 추가 사업비 지원이 아예 힘들어지는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VOLVO

볼보자동차의
광주지역 신규딜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볼보자동차 홈페이지(www.volvocars.c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Volvo: for life